

'스마트시티 전주' 혁신방안 모색

시·LX, '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컨퍼런스' 개최... AI·로봇 등 혁신 가져올 최신 기술 발표·사례 공유

전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일 더메이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등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전주시 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스마트시티 전주,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혁신 방안을 발굴하는 시간으로 꾸며 졌다.

구체적으로 1부 공공분야에서는 스마트도시협회의 스마트시티 사업 동향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트윈 운용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2부 민간 분야에서는 KT의 인공지능과 SK윌더스의 로봇 등을 다룬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기조 발제에 나선 이현구 스마트도시협회 팀장은 스마트시티 주요 정책과 핵심기술,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며, "스마트시티가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도시협회는 도시의 혁신을 가져올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이어 조해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차장은 인허가 등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돕는 디지털트윈 'LX플랫폼'에 대해 소개하며 미래도시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디지털트윈'은 가상의 쌍둥이라는 뜻으로, 현실 속 사



전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일 더메이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등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전주시 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물을 디지털로 구현해 도시문제 해결을 돕는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기술로 손꼽힌다.

1부 마지막 발표에 나선 신정은 카카오톡 이사는 전주시와의 협업사례인 '전주한옥마을 스마트 주차장 서비스'를 예로 들며 실시간 주차 여유공간 및 위치 안내로 보다 편리한 교통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올해

한옥마을 및 노상 주차장 일부를 스마트 주차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어진 2부 민간 분야 발표 시간에는 △KT의 인공지능(AI)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주제 발표 △SK윌더스의 자율주행 순환 안내 로봇 △정주대학교의 초소형 전기차 공유서비스를 통한 지역주민의 근거리 이동 편의 향상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

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인공지능 등의 급부상은 도시를 사람이 쓰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도시를 진화적으로 연결, 성장시키고 있다"면서 "이번에 다뤄진 신기술들은 향후 전주의 시민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에 적극 활용돼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여성이 안전한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

'여성이 안전한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캠페인 전개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영이)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일과 오는 23일 2회에 걸쳐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여성이 안전한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교육은 전주시 성평등 기금 지원 받아 이뤄지며, 여성 폭력 근절과 여성 권익 보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전주시민과 여성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여성 폭력 예방 및 조치 방법 △사례로 알아보는 가정폭력 유형 및 예방 대책 △SNS 인터넷상에서의 폭력 예방 법 △여성 안전 호신술교육 △불법 카메라 탐지 활동 등이다.

강영이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 여성 폭력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법 체험 및 불법 카메라 탐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 증진, 여성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돼 현재 9개 단체의 3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해마다 여성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안성균)는 2일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와 함께 분석한 '전주시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전주 지역 환경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환경 교육에 대한 교원과 학생 등의 인식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환경 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획했다.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조사에는 초·중·고교생 1565명과 교원·교육활동가 192명 등 총 1787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 교원 전원이 '환경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환경교육 활동가의 87%, 학생의 70% 가량이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환경 교육 만족도는 참여 학생 중 80%, 교원 중 70% 이상이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의 사유로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 인지(50%) △흥미로운 구성(27%) △일상과의 관련성(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환경 교육에 '불만족한다'는 설문 참가자의 경우는 △교육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 △자료화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환경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으로 학생들은 생활 속 실천 활동(30%)과 지속적인 교육 운영(23%), 지구공동체성 인식(17%) 등을 꼽았고,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교원들은 지속적인 교육 운영(40.4%)과 생활 속 실천 활동(32.4%) 순으로 답했다.

센터는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교원 및 환경 교육 기관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환경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삶에 기반한 실천 중심 환경교육 등이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탄소중립교육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가져

탄소중립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 전주시, 전라북도환경교육센터, 야호통합교육지원센터,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의 주최로 2일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 위기로 탄소중립의 시급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탄소중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조정림 중앙구환경교육센터장의 센터 환경교육 사례, 전주시

이은혜 기후변화대응과장의 전주시 탄소중립 교육 현황, 안성균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의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대한 발제와 제안토론으로 구성됐다.

제안토론에서는 은혜기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지은 시의원, 최태현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지원처 계장, 장미림 전라북도미래교육연구원 학습연구원 교사, 정영아 전주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강사가 참여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설해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사전점검 등 나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도로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완산구는 울겨울 기상이면 등으로 인한 폭설이 우려되는 만큼 도로 결빙이나 빙판길로 인한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제설 장비 임차 및 자체 구입, 제설취약구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오는 11월 13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도로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 차량 19대와 제설 장비 150대 등 총 69대를 투입, 염화칼슘 814톤과 소금 1284톤 등 제설 자재를 확보해 철저히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임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모래주머니 2만5000여 개를 확보해 주요간선도로와 경사로, 교량 등 30개 구간에 제설함(90개소)과 모래주머니(534개소)를 배치하는 등

대조변뿐만 아니라 이면도로로 취약지까지 신속한 제설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구는 제설취약지 경사로의 결빙 방지를 위해 설치된 15개소 열선시스템의 작동유무를 사전 점검했으며,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소형살포기의 작동상태 점검 및 사용 교육도 실시했다. 동시에 효자동 힐스테일 임차 및 자체 구입, 제설취약구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오는 11월 13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도로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제설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제설작업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께서도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